

# 2009년 군무원 (2009.6.27)

## 1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경제적 요인의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③ 대리인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 ④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2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지역사회 안정성
- ㉡ 범인 체포 건수
- ㉢ 조사활동에 참여한 경찰의 규모
- ㉣ 범죄율 감소

- ① ㉠ 영향, ㉡ 산출, ㉢ 투입, ㉣ 결과
- ② ㉠ 결과, ㉡ 영향, ㉢ 투입, ㉣ 산출
- ③ ㉠ 결과, ㉡ 투입, ㉢ 영향, ㉣ 산출
- ④ ㉠ 영향, ㉡ 투입, ㉢ 산출, ㉣ 결과

## 3 민영화의 한 방식인 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바우처는 바우처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 ② 식품이용권은 개인에게 쿠폰형태의 구매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 ③ 바우처는 구매대금의 실질 지급대상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 ④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등은 종이바우처의 대표적 운영사례이다.

## 4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와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 ② 투명성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 ③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행정의 본래 목표가 왜곡될 수 있다.
- ④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5 다음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이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 ②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

- ③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에 따라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 6 다음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관한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②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신공공관리론이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간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간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7 다음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인 것은?

- ① 언론기관 ② 비정부기구 ③ 정당 ④ 사법부

## 8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외부주도형의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문제 ⇨ 정부의제
- ②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③ 사회문제 ⇨ 사회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④ 사회문제 ⇨ 사회이슈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9 잘못된 교통 신호체계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증대 문제를 도심 교통 혼잡의 핵심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는?

- ① 제1종 오류 ② 제2종 오류 ③ 제3종 오류 ④ 환원주의 오류

## 10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직관적 추측 기법이 아닌 것은?

- ① 브레인스토밍 ② 델파이기법 ③ 교차영향분석 ④ 선형계획

## 1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NPV)가 2보다 크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② 편익비용비(B/C)가 1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③ 내부수익률(IRR)이 높을수록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 ④ 비용편익분석의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때 적용된다.

## 12 다음 중 네트워크 조직의 효용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직 내의 안정성 및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
- ② 정보교환을 효율화하여 정보축적과 조직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 2009년 군무원 행정학 해설

1. **답** ③ (x) 주인과 대리인간에 정보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최소화(대리손실의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자율권 강화보다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통제나 인센티브의 강화가 필요하다.
2. **답** ① ①은 영향(impacts), ②은 산출(outputs), ③은 투입(inputs), ④은 결과(outcomes)에 해당한다.
3. **답** ④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을 전자바우처로 실시하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바우처가 담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공급기관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결제한다.
4. **답** ④ ④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된 정도는 내용적 합리성이다.
5. **답** ③ (x)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탈관료제적 개혁과 처방을 제시했다.
6. **답** ②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7. **답** ④ **정책과정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	① 입법부(의회,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② 행정부(행정수반-대통령·수상, 행정기관, 행정관료), ③ 사법부(법원, 법관), ④ 헌법재판소, ⑤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행정기관)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자	① 정당(여당·야당), ② 이익집단·압력단체, ③ 일반국민, 여론, ④ NGO(시민단체), ⑤ 전문가·학자, 정책공동체, ⑥ 언론·매스컴

8. **답** ③ • 위부주도형 : 사회문제 → (사회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동원형 : 사회문제 → (사회이슈)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외부접근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9. **답** ③ 문제 상황을 잘못 인식한 오류로 제3종 오류(메타오류)에 해당된다.
10. **답** ④ ④ 선형계획은 이론적 예측에 해당한다.
11. **답** 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B/C)가 1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12. **답** ① ① (x)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간 느슨한 연결체로서 조직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고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직이 빈번해진다.
13. **답** ① ① (x)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므로 시간이 지연된다.
14. **답** ④ 부하와의 합리적 교환관계 형성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15. **답** ② **직위분류제의 구조**

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최소단위 <b>예</b> 00실장, 00국장, 00과장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b>예</b>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정직류 등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관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b>예</b> 행정직렬, 세무직렬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최대 단위 <b>예</b> 행정직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직급	(동일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책임도와 관란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b>예</b>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등).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 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됨.
등급	(직렬과 직군을 초월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관련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 직무등급 : 우리나라는 등급은 없고 실정법상 계급으로 표현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직무등급' 개념이 도입되어 '직무의 관련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규정. 고위공무원 단과 외무공무원은 직무등급이 적용되며 더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승격'이라 한다.

16. **답** ① ① 시험시기,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란 시험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뢰도를 의미한다.
17. **답** ④ ④ 인간관계 중심의 인기투표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 다면평정의 단점이다.
18. **답** ④ ④ (x) 종업원인정제도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 달의 인물' 선정 등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존재가치와 기여도를 인정해 주어 인정감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는 ①②③과 달리 Herzberg의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 성과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성과보너스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구성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작업량 보너스	작업량에 따라 금전적 보상 지급
수익분배제도	특정 집단이 가져온 수익 또는 절약분을 구성원들에 나누어 줌.
제안상제도	조직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한 구성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행태보상제도	관리층이 권장하는 특정 행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종업원인정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 달의 인물' 선정 등 구성원의 기여도나 존재가치 인정.

19. **답** ① ①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예산담당자 : 단기적·현상유지적·보수적·부정적·현실적·긴축지향적·저축지향적·실무가적 성격  
└ 기획담당자 : 장기적·미래지향적·쇄신적·긍정적·이상적·확장지향적·소비지향적·이론가적 성격
20. **답** ③ (x) 발생주의는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에 있어서 자의적인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
21. **답** ④ ④ 우편, 조달, 양곡관리 등은 정부기업으로서 기업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정부기업에 산법이 적용된다.
22. **답** ③ 설문은 제도적 접근에 해당한다.

###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 (행태적접근)	부패를 개인행동의 결과로 보고 개인의 윤리나 자질을 부패 원인으로 봄.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가 부패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부패의 사회적 맥락이나 규범과 실제간 간극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회문화적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전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봄(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례·선물문화나 보은의식을 부패 원인으로 보는 경우). 관료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파악.
법적·제도적 접근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봄. (예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 규제기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법 규정, 행정통제 장치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
체제론적 [체계적] 접근	부패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패에 대한 지엽적·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패를 억제하기 곤란하다고 봄.
권력관계 접근	부패는 권력의 오·남용에서 유발. 부패의 원인을 사회 내 권력관계에서 찾을. 관료엘리트가 정치사회 및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준주권집단으로 처신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봄. 정치인이나 관료가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경우
시장·교환 접근	부패란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처럼 특수한 이득을 추구하는 시장 교환 관계 행위. 경제학자들은 정부 규제가 구성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창출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봄.

23. **답** ③ 기초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만을 말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이며 자치구가 아니다.

### 자치구와 행정구

구분	자치구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행정구)
성격	보통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자치권과 법인격·당사자능력 지님.	보통 [일반] 지방행정기관(하급기관) 자치권과 법인격·당사자능력 없음.
설치 요건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에 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예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대구시의 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선출직 → 정무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기관의 장-임명직 → 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 광역시의 군	서울시 동작구, 광주시 광안구,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공기업조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전주시 완산구, 수원시 장안구, 성남시 분당구 →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구(하부행정기관)	읍, 면, 동 → 하부행정기관

24. **답** ④ ④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을 촉진한다.
25. **답** ① ① (x)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다.

### 국고보조금의 특징

특정재원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국가의 감독·통제가 많아 지방통제수단의 성격이 강함.
경상재원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재원(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반대 의견도 있음).
의존재원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 법정비율이 정해지지 않아(규모의 비법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하며 국가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므로 예측이 곤란하고 매년 변화가 심해 재정의 안정성이 약함.
무상재원	대가로서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급부금.
지방비 부담 (대응지원금)	대부분 정률보조로 지방비 부담을 비례적으로 요구(대응지원금)하므로 지방비 부담이 없는 무대응지원금인 지방교부세와 다름.
수직적 재정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 조정.